

# 정부·통신사·문자 사업자,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점검

- 민관 협의체 2차 전체회의 개최...현황 공유 및 향후 일정 등 논의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10일 서울에서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였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 <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과제 >

불법스팸 전단계 부당이익 환수	① 불법스팸 발송자 및 목인·방지 사업자 과징금 부과 ② 불법스팸매 범죄수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③ 부적격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방지 ④ 문제 사업자 영업정지 및 시장퇴출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⑤ 문자 발신번호 위변조 발송차단, 문자서비스 취약점 개선 ⑥ 불법스팸악성문자 발송차단 ⑦ 문자재판매사 식별체계 활용 발송 차단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⑧ 스팸 AI 필터링 및 악성스팸 주의 안내 ⑨ 해외 불법스팸 차단 강화 ⑩ 휴대전화 안심이용 환경 구축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⑪ 관계부처 협력 강화 ⑫ 민·관 공동 대응 상설 협의체계 구축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쓰레기 편지 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 쓰레기 편지 발송자(스팸머) 번호자원 확보 방지 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이 공유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을 환영하고,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 쓰레기 편지(스팸) 수신·발신 차단, 쓰레기 편지 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 쓰레기 편지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민관협력으로 문자 결제 사기 등 악성 문자를 발송단계에서 사전차단하는 X-Ray 서비스를 4월9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 쓰레기 편지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 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사업자 간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위원 현황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대식 (044-202-6650)
		담당자	사무관	남민우 (044-202-66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장호 (044-202-6660)
		담당자	사무관	김병희 (044-202-66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사이버침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최광기 (044-202-6415)
		담당자	사무관	김성환 (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최충호 (02-2110-1520)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심 (02-2110-1522)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붙임****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위원 현황**

구분	참여기관명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통3사	SKT
	KT
	LGU+
제조사	삼성전자
국제전화 사업자	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드림라인
대량문자 사업자	SKB
	인포뱅크
	다우기술
	젬텍
	슈어엠
	CJ올리브네트웍스
	스탠다드네트웍스
	케이피모바일
유관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
플랫폼 사업자	카카오